

KWDI 이슈페이퍼

수행과제명 여성의 생애주기별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(Ⅱ) :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을 중심으로
과제책임자 장미혜 선임연구위원 (Tel: 02-3156-7133 / e-mail: mhchang@kwidimail.re.kr)

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한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 강화

초록

- 그 동안 안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과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함.
- 따라서 공공장소별 여성의 위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현재 공공장소에 대한 법과 제도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여성에게 특화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.
- 35개의 공공장소를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모든 장소에 대하여 남성에 비해 여성의 위험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5개 공공장소 중 공공 화장실에 대한 여성의 위험도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공공장소 관련 안전교육의 필요성 역시 노년기를 제외한 생애주기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법령 분석 결과 안전 규정은 여러 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규정 역시 물성적이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법을 제·개정할 필요가 있음.
-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, 공공장소 관리, 안전교육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.

청년기(20~29세) 공공장소에 대한 위험 인식도



1. 배경 및 문제점

📍 공공장소에서 여성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

- ▶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공공장소가 여성에게 안전한 장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.
- ▶ 공공장소에서의 여성안전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안전사고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느끼는 위험과 안전에 대한 인식조사는 부족하였음
- ▶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인식을 남성들의 인식과 비교하여 공공 장소에서의 여성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📍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안전관련 법과 제도 검토의 필요성

- ▶ 안전정책은 다양한 부처에서 실행되어 왔으며, 정책의 초점 역시 다양함. 안전행정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관리,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,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는 등 부처별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안전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어려움.
- ▶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역시 다양한 여성안전정책을 시행하였음. 그러나 여성안심도시, 여성안심 주차장, 안심귀가길, 안심택배서비스, CCTV설치, 범죄예방형 건축물 설계 등의 안전정책은 홍보성 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음.
- ▶ 안전사고 발생 시 중앙 및 지방 정부는 다양한 사후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은 안전사고 장소에 대한 시설기준 강화가 중점이 되어왔음.
- ▶ 2017년 국민안전기본교육법의 제정으로 안전교육에 대한 강화기준이 발표되었으나,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.
- ▶ 따라서 안전관련 법과 제도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.

2. 조사 및 분석결과

📍 공공장소의 위험 인식은 여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▶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35개의 공공장소를 선정한 후 상가 및 쇼핑공간, 문화 및 스포츠 시설, 여가시설, 대중교통·보행시설, 교육·보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, 복지 및 건강관련 시설, 기타 등 7개 유형으로 분류함.
- ▶ 각 35개 장소가 안전사고 발생 측면에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질문하였으며, 응답자는 '전혀 위험하지 않다(1점)'부터 '매우 위험하다(7점)'까지 7점 척도의 응답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.
- ▶ 청년기(20-29세), 성인기(30-44세), 중장년기(45-64세), 노년기(65세) 이상 4개의 생애주기로 분류하여 생애주기별로 성별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위험 인식은 여성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. 특히 청년기(20-29세)는 상가 및 쇼핑공간의 하위 장소인 재래시장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위험하다는 인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.

- ▶ 여성이 위험하다고 인지한 장소는 여가시설 분류 중 등산(산), 낚시(강, 바다), 야영장(숲)과 같은 야외 여가 활동 장소와 물놀이 시설(수영장, 워터파크 등)이며, 기타 분류 중 대중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 등, 주차장(지상 및 지하에 위치한 공동주차장), 공중 화장실(개방형 화장실 포함)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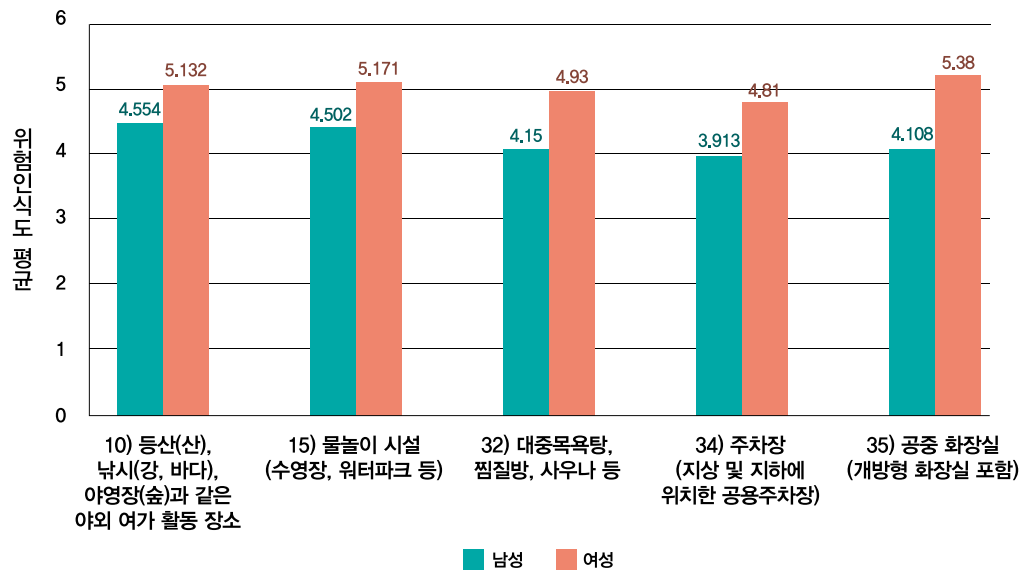
〈표 5〉 청년기(20-29세) 남성과 여성의 안전사고 위험도 인지에부

(단위 : 점)

대분류	장소	남성	여성	전체	t-value
	소분류				
여가 시설	10) 등산(산), 낚시(강, 바다), 야영장(숲)과 같은 야외 여가 활동 장소	4.554	5.132	4.828	-5.145***
	15) 물놀이 시설(수영장, 워터파크 등)	4.502	5.171	4.818	-5.814***
기타	32) 대중목욕탕, 찜질방, 사우나 등	4.150	4.930	4.519	-7.231***
	34) 주차장(지상 및 지하에 위치한 공동주차장)	3.913	4.810	4.338	-7.751**
	35) 공중 화장실(개방형 화장실 포함)	4.108	5.380	4.710	-10.176***

주: *(<0.05) **(<0.01) ***(<0.001)

청년기(20-29세) 남성과 여성의 안전사고 위험 인식도



☑ 생애주기별 · 성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교육의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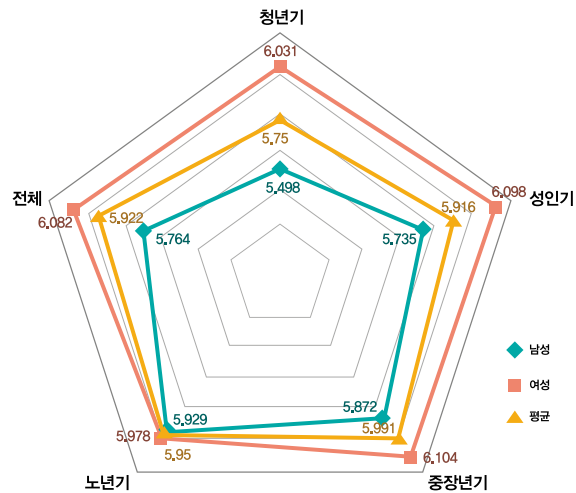
- ▶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함.
- ▶ '전혀 필요하지 않다(1점)'부터 '매우 필요하다(7점)'까지 7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, 전체 평균 5.922점으로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.

- ▶ 청년기(20-29세), 성인기(30-44세), 중장년기(45-64세), 노년기(65세 이상) 4개의 생애주기로 분류하여 성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노년기를 제외한 전 생애주기에서 안전교육 필요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▶ 여성들이 공공장소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더 높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에 더 민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.

〈표 30〉 생애주기별 · 성별 안전교육 필요에 대한 인식

(단위 : 점)

구분	내용	남성	여성	전체	t-value
공공장소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여부	청년기 (20-29세)	5.498	6.031	5.750	-5.704*** (0.000)
	성인기 (30-44세)	5.735	6.098	5.916	-5.165*** (0.000)
	중장년기 (45-64세)	5.872	6.104	5.991	-4.493*** (0.000)
	노년기 (65세 이상)	5.929	5.978	5.950	-0.322 (0.747)
	전체	5.764	6.082	5.922	-8.522*** (0.000)



[그림 1] 생애주기별 · 성별 안전교육 필요에 대한 인식

📍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 분석 결과

- ▶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법령 분석결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을 고려한 경우는 적은 편임.

〈표 7〉 공공장소의 여성안전 관련 법령

법령	안전관련 규정	공간	대상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	*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기본 계획과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(제20조의2 제2항, 제3항),	공항시설, 철도시설, 도시철도 시설, 항만시설, 수용인원 1,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(제20조의2 제1항, 제1호~제4호, 제9호)	성별, 연령별, 재난약자 (장애인·노인·임산부·영유아·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)제20조의2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3 제5항)
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	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(제9조 제1항 제2호)	특별시장 등이 보행환경개선 지구를 지정	노인·임산부·어린이·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
「모자보건법」	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·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건강 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 하고 관리 (제15조의4 제1호~제3호)	산후조리원	임산부 및 영유아

- ▶ 안전의 의미를 재난안전, 시설안전, 보건안전, 생활안전, 범죄안전 등으로 구분할 때 현행 안전 관련 규정은 재난, 시설 및 보건안전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음.
- ▶ 개별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한 법령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소관부처가 산재되어 있음. 여성 안전을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원칙과 중요사항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함.

3. 정책제언

📍 공공장소의 안전에 관한 현행 법령 분석 결과

- ▶ 현재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전반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여성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함으로써 여성안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할 수 있음.
- ▶ 각 개별법에 제시되어 있는 안전에 관한 규정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고려하여 각 개별법을 개정 하여 여성안전을 강화할 수 있음. 특히 여성안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공간을 확대하고, 안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▶ 2017년부터 시행되는 「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」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 혹은 공간 이외의 장소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 여성안전실태 조사에서 여성들의 위험 인식도가 높은 장소인 여가 시설이나 대중목욕탕, 찜질방, 싸우나 등 혹은 공중 화장실에 대한 안전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. 따라서 여성의 위험 인식도가 높은 공간에 대한 안전교육규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.

📍 공공장소 안전정책강화 방안

- ▶ 공공장소에 배치된 안전요원이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숙지하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사고 위험에 대한 안내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.
- ▶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공장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. 특히 성별로 이용 여부가 달라지는 공공장소가 안전점검 인원의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점검 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▶ 공공장소의 시설을 설계하고 구축할 때 성인 남성 뿐 아니라 여성과 아동·청소년, 노인 등 다양한 집단의 신체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📍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여성안전교육 강화 방안

- ▶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부족하고, 특히 실습·체험형 안전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들에게 교육 방법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일정에 대한 안내를 할 필요가 있음.
- ▶ 노인여성, 취업여성, 전업주부 등 여성 내부의 집단별 차이를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.